

이명박 정부에는 광주·전남이 없다

청와대 수석 이어 각료 인선서도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수석 기용에 이어 각료 인선에서도 호남 인맥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호남과 중앙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단절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차질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의 '호남 고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일각에서는 벌써 '영남 공화국'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사회 통합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사회적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의 13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15일께 각료 내정자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13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영남 출신이 5명,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3명, 충청 출신 2명, 강원과 이북 출신이 각 1명씩 내정됐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은 전북 고창 출신인 정운천 한국농업 CEO 연합회장이 유일하게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개 부처 장관 이외에 남북관계를 맡는 특임장관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으나 원적만 전남이고 서울에서 성장, 호남 인맥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이마저도 통합민주당 측에서 특임장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최종 기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제기됐던 김종민 전 검찰총장과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장관 발탁설이 나왔던 이만희 전 환경부 차관, 연일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장수 국방부장관도 이명박 초대 내각 인선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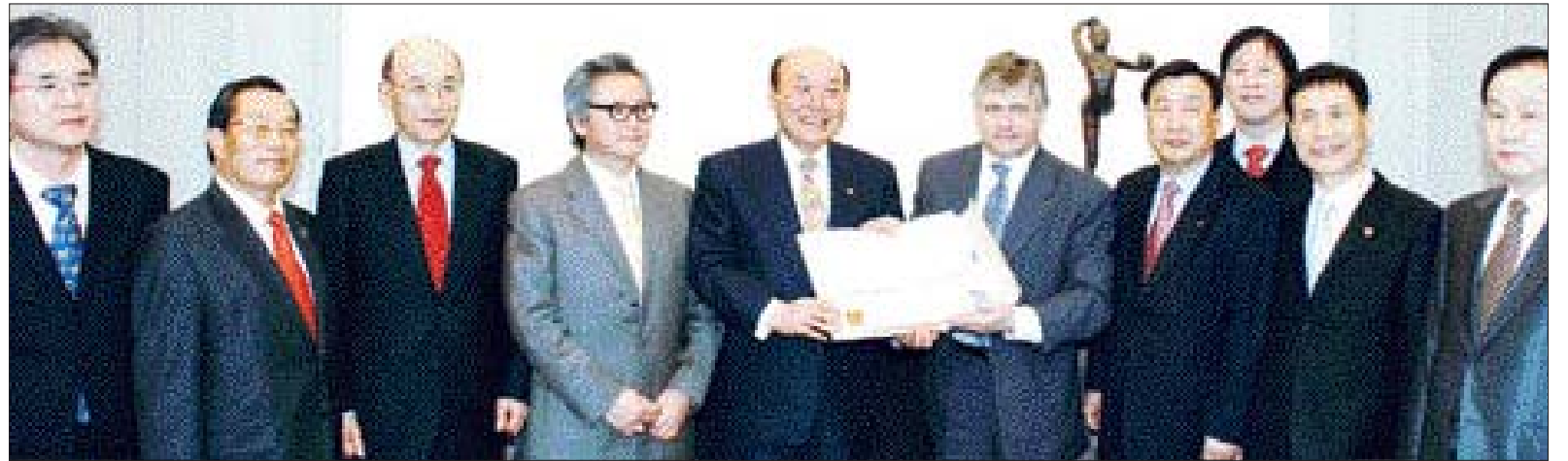
비서관 인선에 이어 초대 내각 구성에서도 호남 인맥이 철저히 배제되고 영남 편향 인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우려를 넘어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 같은 영남 편향적 인적 구조가 중앙 부처 고위 공직자 인선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그동안 우려해왔던 이명박 정부에서의 '호남 고립'이 현실화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관계에서는 조만간 이뤄질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기용 및 정부 부처 인사에서도 호남 인맥이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호남 인맥 붕괴는 정부와 호남의 소통 채널 단절로 이어지면서 지역 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호남 고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지역 안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하계U대회 유치신청서 제출 박광태 광주시장이 13일 오후(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본부를 방문. 에릭 생트롱 FISU 사무총장에게 2013년 광주 하계U대회 유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주 조선대 교수, 나중천 광주시의원, 정우성 주별기에 대사, 김상우 유치위부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 에릭 생트롱 FISU 사무총장, 이희범 유치위원, 김명환 연세대 교수, 김남일 광주시의원, 김윤석 광주시경제부시장. (광주시 제공)

광주 문화수도 조성위 폐지하면서 부산 영화산업 7천억 지원 한다니...

새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폐지를 추진하는 등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뿌리째 흔들면서 부산의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전폭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제신문 등 부산지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가 매년 재정을 늘리는 부산국제영화제

(PIFF)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PIFF 재단법인을 설립,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호 PIFF조직위원장은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사업 구체화를 위해 협의를 갖기도 했다.

이 방안은 부산 국제영화제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 PIFF 재단법인을 설립, 국비 700억원, PIFF 자체수익사업 300억원 등 1천억원 규

모의 재단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광주비엔날레의 재단기금 286억원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국제신문 등 부산지역 주요매체는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PIFF가 세계 4대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지역민들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성위 폐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 기구축소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지역차별이 가시화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성위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 국회계류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추진단은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국장급 근무의 감원 등 위상·기구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은 "새정부가 광주문화수도조성사업을 폐지하면서 부산영상산업을 밀어주는 것은 지역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조성위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달리 '부산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광주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별법은 향후 5년 동안 정부재원 7천억원을 영상문화산업 육성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윤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새정부가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 정부지원을 몰아주는 것은 광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일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식경제 이윤호·법무 김경한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윤곽'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이 14일 윤곽을 드러냈다.

이명박 당선인 측근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60)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장관에는 김경한(64) 전 법무차관, 교육과학부 장관에는 어운대(62) 전 고려대 총장, 문화부 장관에는 유인촌(57) 중앙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는 박은경(62) 대한YWCA연합회 회장이 사실상 내정됐으며 특임장관에는 남주홍(55) 경기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대선 출신으로 대진교와 연세대를 나왔으며 김경한 전 차관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인 어운대 전 총장은 경선 때부터 이 당선인의 활동을 도왔으며, 환경부 장관 내정자인 박은경 YWCA연합회 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직이 순천으로 본격은 서울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임장관으로 거론되는 남주홍 교수는 북한 전문가로, 대선 때 이 당선인의 정책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이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강만수(63) 전 재경원 차관, 외교부장관에는 유명환(62) 주일 대사, 국방부 장관에는 이상희(63) 전 합참의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원세훈(57)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정종환(60)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농수산식품부 장관에는 정운천(54) 한국농업CEO연합회장,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에는 김성이(62) 이화여대 교수, 노동부 장관에는 이영희(64) 인하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통폐합설 시민들 "분교 전략" 발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목포해양대(총장 신철호)를 한국해양대(부산)에 통합시킨다는 설이 불거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산지역 일간지 국제신문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산에 있는 해양 관련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의 힘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새 정부의 '신 해양산업 육성·개발'의 기반시

설 구축방안으로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의 통폐합이 해양수산 특성화대학 모델이 될 수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목포해양대는 발칵 뒤집혔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부산과의 거리도 멀 뿐 아니라 현재 목포해양대의 취업률 등이 월등하기 때문에 통폐합 효과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목포시민 등 지역민들도 "통폐

합 추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목포해양대의 분교 전략을 의미한다"면서 "지역 특수성을 감안, 해양대의 특성을 살려야 하므로 통폐합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발끈했다.

목포해양대 시스템온송학부의 경우 2007년 졸업자 178명 중 98.3%인 17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지난해 평균 87.8%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 통폐합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고 오보다"며 "그런 일이라면 우리 분과가 모를리 없는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200-9999